

7월부터 2·3인 병실도 건보 적용

오는 7월부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2·3인 병실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의료비 부담을 덜게 됐다. 그동안은 비급여로 환자가 100% 입원실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법령 개정을 거치면 7월1일부터 상급종합병원(42곳 5800개 병상)과 종합병원(298곳 9200개 병상)의 2·3인실 1만5000개 병상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병상 가동률이 90.7~102.1%에 달하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4~6인 일반병상은 80% 안팎(상급종합병원 79.1%, 종합병원 84.4%)인 탓에 여필 수 없이 상급병실을 이용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상급·종합병원 4~6인실 의무비율 80%로 ↑ 구체적 본인부담비용 건보심의회 거쳐 재발표

실제 국민건강보험공단 2013년 조사에 따르면 상위 5개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약 84%의 환자가 일반병실이 없어 고가 상급병실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

이에 복지부는 원치 않는 상급병실 입원이 많고 중증환자가 주로 입원하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상급병실부터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넣기로 했다.

이런 경우가 상대적으로 적은 병·의원급(병상 가동률 43.0~75.2%, 일반병상 비율 72.1~85.5%)에 대해서 연말까지 사회적 의견을 수렴해 적용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본인부담률은 병원 종류와 인실에 따라 30~50%로 차등 적용된다. 현재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4~6인 일반병실은 입원료의 20%(상급종합병원 4인실은 30%)만 환자 본인 부담된다.

복지부는 대형병원과 2·3인실 돌림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은 40~50%(2인실 50%, 3인실 40%), 종합병원은 30~40%(2인실 40%, 3인실 30%) 등으로 일반병실보다 부담률을 다소 높였다.

이런 취지에 따라 회귀난치, 차상위계층, 중증질환자, 결핵 등 일부 환자군은 본인부담률을 0~14%로 더 낮추는 특례조항이나 본인부담 상한제 등을 적용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2·3인실 가격과 환자

부담비용 등은 6월까지 검토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발표할 예정이다.

등시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일반병상 의무 비율을 확대한다.

현재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병원별로 전체 병상중 4~6인실을 70% 이상만 확보토록 규정했으나 이를 80%로 상향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케어)에 따라 7월부터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 위해 우선 본인부담률, 일반병상 비율 등을 법령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다음달 16일까지(시행규칙,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은 다음달 21일까지) 복지부 예비급여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뉴시스

흥기로 이웃주민 위협 40대 입건

광주 동부경찰서는 26일 흥기를 들고 이웃을 위협한 혐의(특수폭행)로 A(48·일용직)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 씨는 지난 25일 오후 11시27분께 광주 동구 동명동 자신이 사는 원룸 건물 3층 복도에서 흥기를 들고 서성이다가 옆집 주민 B(28·여)씨를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체무복축에 시달리던 중 체무자가 찾아올 것 같아 흥기를 들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동기 등을 조사해 신병 처리방향을 정할 계획이다.

조인호 기자

'게임 방해 시비' 주먹질 대학생 연인 입건

광주 북부경찰서는 26일 게임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주먹질한 혐의(폭행)로 대학생 커플인 A(25)씨와 B(26·여)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25일 오후 9시에 광주 북구 한 원룸에서 서로의 얼굴을 7~10여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여자친구 B씨가 "게임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주먹질했으며, B씨도 이에 대해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배고프지 않냐"는 말을 무시하고 컴퓨터 게임에 열중한 남자친구 A씨가 욕설하자 키보드를 건드린 뒤 다툰 것으로 조사됐다.

"무시하는 것 같아서" 후배 폭행 20대 구속

광주 동부경찰서는 26일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고향 후배 3명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이모(22·무직)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3일 오전 1시에 광주 동구 자신의 집으로 고향 후배 A(19)씨 등 3명을 불러 흥기 등으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다.

경찰조사에서 이씨는 "후배들이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고 피해 무시하는 것 같아 때렸다"고 진술했다.

SNS서 받은 음란물 유포 협박 20대 구속

광주 서부경찰서는 2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알게된 여성에게 받은 음란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강요미수)로 A(29)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중순부터 올해 1월6일까지 모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교류하던 20대 여성 B씨에게 35차례에 걸쳐 음란행위 촬영 영상을 받은 뒤 "추가로 영상을 보내주지 않으면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음란행위 영상을 보내주면 돈을 주겠다"며 B씨에게 접근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에게 조작한 공인인증서와 자몽이체 예약계좌를 보여주며 "동영상 보고 끝마로 삭제하겠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가 영상을 보내주지 않자 "기존에 받은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으며, 경찰 수사가 진행된 이후 각종 SNS 계정을 삭제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SNS에 접속한 IP주소 등을 추적해 A씨를 붙잡았다.

사냥개로 출동 경찰관 협박한 50대 구속

주거지 주변의 주민들에게 쇠파이프와 키우던 사냥개를 풀어 위협하고 노상에 주차된 차량에 불을 질러 방화한 5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경남 밀양경찰서는 자신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누군가 쓰레기를 버려줬다"며 112로 신고한 후 출동 경찰관에게 욕설과 키우던 사냥개를 풀어 협박하고, 인근 공터에 주차된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공무집행방해, 협박·손괴, 방화) 등으로 A(57)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5일 오후 2시에 자신의 집 앞 길가에 누군가 쓰레기를 버려줬다며 112로 신고하고 출동한 경찰에게 욕을 하며 키우던 사냥개를 풀어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달 27일 오전 9시에 C(64·여)씨가 운영하는 상점에서 욕설과 함께 쇠파이프로 식자재 등 40만 원여치를 부순 혐의도 받고 있다.

광주지검, 지방선거 불법행위 58명 입건

광주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석담)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26일 현재 총 58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중 10명을 기소하고 8명을 불기소 처분했으며, 40명은 수사 중이다.

실제 검찰은 불법 당원모집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과 함께 구청장 예비후보자 등 7명을 이달 초 재판에 넘기기도 했다.

광주지검은 시·도선관위와 선거사범 단속을 위한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제5회 지방선거 당시 광주지검 담당(광주·나주·화순·장성·담양·곡성·영광) 내 선거사범 입건 인원은 318명, 이중 구속자수는 14명이었다. 6회 지방선거에서는 312명이 입건됐으며, 구속자 수는 16명으로 집계됐다.

한편 광주경찰도 지난 14일 기준 선거 범죄 9건 12명을 조사 중이다. 유형별로는 사전선거 3건 3명, 금품제공 3건 4명, 허위사실공포 2건 4명, 공무원 개입 1건 1명이다.

전남경찰청은 지난 16일 기준 52건(118명)에 대한 수사를 벌여 이 중 17건(27명)을 종결했다. 나머지 35건 91명에 대해서는 현재 내사 또는 수사를 벌이고 있다. 유형별로는 사전선거운동 18건(27명), 금품제공 18건(28명), 흑색선전 5건(8명), 공무원 선거개입 5건(5명), 여론조작 4건(48명), 기타 2건(2명)이다.

추준정 기자



임진각 찾은 참전용사 가족들 남북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26일 오후 경기도 파주 임진각에서 미군 참전용사 및 가족들이 일대를 둘러보고 있다.

AI경보 '주의'로 하향...전남도 현 방역태세 유지

내달 말까지 대책상황실 운영

전남도는 26일부터 고병원성 인플루엔자(AI) 위기경보가 '심각'에서 '경계' 단계로 하향 조정됨에도 불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현 방역태세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남도는 위기경보가 '주의' 단계로 조정돼도 특별방역대책 기간인 5월 말까지는 시군, 동물위생시험소 등과 함께 27개의 AI 방역대책상황실을 운영해 만일의 상황에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오리농가에 대해 입식 전 철저한 방역점검 및 빈 축사 환경검사를 통해 이상 없는 경우 입식을 승인하는 '오리 입식승인제'도 유지하기로 했다.

또 반북에서 발생하거나 이번엔 발생한 7개 시군에는 거점소독시설을 운영하고, 휴시나 잔존해 있을 AI 바이러스 사전 색출을 위해 5월 말까지 전체 오리농장 일제검사를 추진하는 등 AI 재발 방지를 위한 방역대책을 계속 추진한다.

김상현 전남도 동물방역과장은

"과거 발생 시기를 고려하면 현재도 AI가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방역대책을 유지하겠다"며 "축산농가에서는 매일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하고 축산차량 통제 등 농장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남지역에서는 지난해 12월 10일 영암 종오리농장을 시작으로 5개 시군에서 11건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해 40농가의 가금류 81만 200마리가 살처분됐다.

김정환 기자

2030세대 농지지원사업

농지매입비축사업, 농지임대수탁사업, 경영희생지원 농지매입사업, 농지연금사업, 농지규모화사업

농어촌 행복파트너 농지은행사업

농어촌의 행복에 지지 않는 별이 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농어민들이 지금보다 더 큰 행복을 이어갈 수 있도록 농지은행은 영농개시에서 은퇴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립니다

2030세대 농지지원사업

20~39세 창업후계농에게 5~10년 장기임대차, 장기저리(3.0%, 1~2% 농지매입자금 융자 지원)

농지임대수탁사업

자력 어려운 농지소유자 농지의 임대를 위탁받아 전업농에게 5년 이상 장기 임대

농지연금사업

65세 이상 고령농업인 농지담보로 매월 연금처럼 생활안정자금 지급

농지매입비축사업

고령은퇴 이후 농업인 농지 매입비축을 통해 농지시장 안정 도모

경영희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자연대해 부채 등 경영위기 농가의 농지매입 후 10년간 임대보장, 경영 정상화 지원

농지규모화사업

농지매입 임대차 교환분할을 통한 농가의 영농규모 확대 지원